

‘역사주권 수호’... 전직 역사분야 국책기관장 한자리에 오늘 만민역사공동회 긴급토론

민주 정동영 의원·민주연구원 공동주최... 뉴라이트 국가개조 구상 저지 위해 개최
뉴라이트 인사 배치 논란 국책기관의 전직 기관장 모여... 이종찬 광복회장 특별축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뉴라이트 국가개조 구상 저지를 위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만민역사공동회’로 명명한 이번 토론회는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등 11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눈길을 끈다. 소위 ‘뉴라이트’ 인사 배치로 논란이 된 역사분야 국책기관장의 ‘전직 기관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1부-만민역사공동회’, ‘2부-긴급대토론회’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1부 만민역사공동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의 특별축사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의 기조발언 △공동주최 116명의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참석자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진다.

2부 긴급토론회에서는 노종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인병우 한신대 명예교수(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가 좌장을 맡아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가사관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에, △정태현 고려대 명예교수(전 한국사연구회 회장) △한시준 단국대 명예교수(전 독립기념관 관장)가 각각 발표에 나선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의 총평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좌장과 발제자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명해 논란이 되는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등 역사 관련 국책기관에 포진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에 대비된다.

또한, 2부 토론회에서는 △정연식 서울여대 명예교수(전 역사학회 회장)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동영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 이 토론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도 예정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특별축사를 포함해 시민사회 원로들이 기조 발언을 잇는다. 역사 단체장과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국회의원은 “‘독립기념관’까지 점령한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역사인식은 역사

주권을 저버리는 반헌법적이고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역사·학술·보훈기관 요직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탈락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고 전반적 21세기관 대동아공영권이 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음산에 일본 밀정이 있다’고 밝힌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참석하셔서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선열들의 피로 만들어 낸 헌법과 역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백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뜻을 함께 모아주셔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만민역사공동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국회를 이어 계속해서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 정동영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 기금위 내실화 필요

최근 10년 국민연금 기금위 정부 축출률 42%
같은기간 의결 안건 131건 중 88% 원안 그대로 의결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회(이하 기금위)의 정부 축출률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 논의된 의결 안건 131건 중 88%는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기금위가 기금운용에 있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7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중 대리 축출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평균 축출률은 42%로, 위촉직 위원의 평균 축출률 82%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2회의 회의 중 △농림

축산식품부 차관(3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4회), △고용노동부 차관(8회) 순으로 축출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당연직 위원과 14인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직 위원은 가입자 대표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기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은 총 131건이었는데, 그중 116건(88.5%)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결 및 일부 의결, 재논의 의결은 15건에 불과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이 증가 추세에 따라,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88.5%의 원안 가결률은 충실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지우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상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후원금 전달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한규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비 기탁식이 열렸다.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직 때 몰랐고 허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이다. /뉴스

전북자치도 재해예방사업, ‘안전 전북’ 실현 큰 기여

자연재난 사전 대비 올해 총 1697억원 투입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
도심지 호우 피해 예방 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

수시로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 재난에 대비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등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재해예방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해예방사업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비롯해 △재해위험 개선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붕괴 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지구 74개와 계속 마무리 지구 72개를 포함한 총 146개 재해 예방 사업 지구에 총 사업비 1,697억원(국비 849억원 포함)을 확보해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12개 지구 400억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37개 지구 681억원 △붕괴 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 17개 지구 234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0개 지구 168억원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수유출저감시설 2개 지구 180억원 △소하천 자동 수위 관측시스템 49개 지구 34억원 등 하천 및 하수 처리, 우수지 정비, 사면보강, 배수펌프장 설치 등 종합적인 재해 예방 사업도 있다.

▲자연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한 재해 위험 개선 지구(풍수해 포함) 정비사업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개별 단위로 시행하던 단편적인 재해 예방 사업에서 벗어나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 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 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김제 마산지구와 완주 신지지구, 부안 중북지구 등 신규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2개 지구에 국비 200억원 등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사업은 지난해 국회 막바지 예산 활동을 통해 순창 오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의 신규사업과 27개의 계속사업에 국비 34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실태조사 용역 시행) 추진
도는 낙석 및 사면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17억원을 포함해 234억원을 확보했으며 신규 5개 지구와 계속·마무리지구 12개를 포함한 총 17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14개 시군 총 900개소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급경사지 발굴과 급경사지 DB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 점검 시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으로 매년 확대되는 재해 예방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는 지난 1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해 예방 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및 소하천 스마트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
도는 올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국비 84억원을 확보, 지난해 74억원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태풍·국지성 호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하천의 인근 주민 대피를 위해 추진 중인 소하천 스마트 수위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 17억원을 확보, 14개 시·군 49개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이다. /뉴스

코레일 임직원 병가 악용 사례 232건

민주 한준호 의원 “복무기준 명확히 규정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022년~24년)’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병가 사유로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이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유가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 203쪽 9번에 따르면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술 등을 병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가사와 관련된 사항은 병가의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병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라도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병가 악용’ 백태는 병가의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보호·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통상 사측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 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갑질폭행 처벌,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민주 이춘석 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전북 한 축협 조합장이 반년 동안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직원들이 고소

하자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폭행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협 직원들이 고소를 취하지 않아 최근 해당 조합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갑질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도 고소하지 못하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본인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